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무안 낙점...남은 절차는

국방부 선정위원회 구성...최종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지자체 유치 신청...신공항 건설

이전 후보지 등 주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국방부가 2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발표함에 따라 향후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선정, 신공항 건설 등의

절차가 차례로 이어진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진행할 절차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종전부지 활용 방안,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재부·국토부 차관, 통합특별시장, 이전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 군수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음 단계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이다. 지원계획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목표와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

계획, 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 협의가 이뤄지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한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 방안이 구체화하는 단계다.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가 뒤따른다.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와 인근 시·군·구의 수용영향도 80웨를 이상 지역 등을 고려,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선정계획은 이전 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어지는 핵심 절차는 주민투표와 이전 유치 신청이다. 국방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 여론과 해당 지자체의 유치 의사가 최

종 이전부지 선정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뒤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시작점이라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사실상 입지 결정의 종착점인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종 부지가 정해지면 곧바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이전사업을 시행, 신공항 건설에 착수한다. 동시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심 의하고, 시행 승인과 고시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 종전부지 개발사업도 병행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무안 선정 환영”

광주시·전남도 적극 지원 약속...광주상의 “출발점 의미”

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18년간 풀리지 않은 실타래를 풀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자 6자 협의체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의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무안군, 전남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고, 1조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이전 부지 선정이 완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

부와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이 오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환영했다.

도는 “앞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등 모든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무안군의 비전을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도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결정은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해 경제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동민·이현규 기자 yang00@

이 대통령 “‘5·18 전문 수록·계엄 요건 엄격화’ 개헌 가능”

“가능한 범위 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26.2조 추경안 국회 협조 당부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여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 라든지, 또는 이번엔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룬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

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저는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며 “그러나 합의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마침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해제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즉시 무효화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시, 중동전쟁 대응 200억 특례보증 추가 시행

시·자치구 합동 점검회의...물가·유통·에너지 대응 강화

광주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한다. 또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4월 할인 쿠폰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동 상황 관련 시·자치구 비상경제대응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추가로 시행한다. 또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4월 할인 쿠폰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상황 여파로 자금난이 우려되는 1000

여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집행하는 등 총 1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비상경제대응TF’에 ‘취약계층 지원팀’을 신설, 기존 1단 3팀에서 1단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유가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시민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고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석유판매업소 가격 점검과 매점매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 해소 선제 대응

포장재 급등에 농식품기업 긴급 지원...1억4000만원 투입

중동 정세 불안으로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자 전남도가 농식품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나섰다. 원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 전에 현장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전남도는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4000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나프타와 에틸렌 등 기초 원자재 공급 차질로 산업용 포장재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가격도 10% 이상 오르며 식품 제조업체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원은 신속성에 방점을 뒀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해 기업이 단기간 내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상은 유통업체로부터 식품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OEM 방식 기업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3월 15일 이후 납품 실적이 있는 도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와 사업 자필증, 위탁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향후에도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대응 중심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14명 공채...역대 최대 규모

지역인재 중심 선발...장애인 별도전형 등 포용채용

전남개발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4명 공개채용에 나서며 지역 일자리 확대에 속도를 낸다.

전남개발공사는 2일 2026년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단일 기준 최대 규모로, 지역 인재 확보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집은 건축·토목·전기·도시계획·재난안전 등 기술6급과 경영·법률·회계 등 행정6급을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행정7급 장애인 전형 1명도 별도로 선발한다.

채용 방식은 지역 제한을 적용해 전남 기반 인재를 우선 발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진입 기회도 넓혔다. 장애인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전형 절차는 필기시험(NCS 및 전공)을 시작으로 서류와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무역량과 공공성 중심 평가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서접수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전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5월 16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7일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전남의대’서 계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조만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안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해 공식화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전남국립대의 부속병원 설립지를 놓고 대립하면서 지연돼 온 30여년 묵은 지역민의 숙원 해결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전남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두 대학은 지난 2024년 11월 통합을 전제로 국립대를 유치했지만, 막상 통합 신청서 작성을 앞두고 대학본부와 의대 위치를 명확히 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월까지 양 대학이 김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구하면 전남의대 설립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대학이 합의 해 오는 5월까지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면 전남의대 개교 시점은 오는 2028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교육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정원 100명 규모의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역민 숙원 해소를 위해 전남의대 개교 시기를 오는 2028년까지 2년 정도 앞당겨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